

# 푸드플랜 추진에 대한 몇가지 제언

허 남 혁

푸드시스템 연구자(지리학)

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

[hurnh@naver.com](mailto:hurnh@naver.com)

**나라의 운명은 국민들의 먹는 방법에 달려 있다.**

*La destinée des nations dépend de la manière dont elles se nourrissent.*

Jean Anthelme Brillat-Savarin (1825) <*Physiologie du gout*>

(브리야 사바랭, (2004) <미식 예찬>)

# 1. 서론

- **푸드플랜의 시대, 그 필요성**

- 먹거리 이슈의 다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: 건강 이슈, 환경 이슈, 사회 이슈, 도시 이슈와의 연계성과 새로운 가치
-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(SDG)의 Goal 2: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사회적/경제적/환경적 균형전략

- **세계적 추세**

- 국가푸드플랜: 영국(2010), 호주(2013), 프랑스(2010, 2014, 2018), 핀란드(2017), 스웨덴(2017), 캐나다(진행중), 미국(시민사회 제안)  
=>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,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지방정부들도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거나 수립중
- 지역푸드플랜: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(2015.10) 이후 전세계적으로 도시지역의 사례들이 급속하게 확산 중



도시 먹거리 네트워크의 전세계적 확산 (Moraques-Faus, 2018.6.20)

- **정부의 현재 정책 추진 현황**

- **국가푸드플랜:** 2017년 5월부터 논의 시작, 현재 막바지 작업 진행중(내년초 발표 전망)

- **지역푸드플랜:**

- 1) 지원사업 진행(지자체 푸드플랜 수립지원, 지역거버넌스 지원, 교육지원 등)
- 2) 농식품부 내 먹거리순환체계구축 추진단(TF)과 전문가자문단 운영
- 3) 지역푸드플랜 가이드북 배포(2018.2), 푸드플랜 수립지원 지자체 대상 워크숍

- **자체 지역푸드플랜 추진:**

- 1) 전주(2015)와 서울(2017)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기수립
- 2) 대전과 수원은 지역시민사회 주도로 추진 중인 사례(대전 푸드플랜네트워크, 수원 건강먹거리시민네트워크)
- 3) 아산은 신활력플러스사업(아산사회적경제 먹거리거버넌스 추진)과 지역푸드플랜 연계추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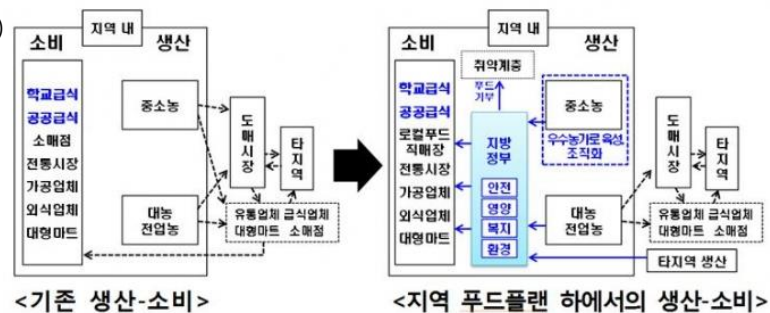
## 2. 몇가지 문제점

### 1) 중요한 지점들

- 첫째,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식과 개념의 공유 여부
- 둘째, 관련 분야간 협력의 의지 확인과 연대
  - 부처간, 시민사회단체간, 전문가간
- 셋째,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의 장 마련의 필요성

## 2) 현재 문제점

- 첫째, 냉정하게 판단하건대 현재의 푸드플랜 추진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수준에서의 단독플레이에 불과하다는 문제
  - 푸드플랜의 필요성은 농업/먹거리의 새로운 다기능성에서 출발: 보건, 환경, 문화, 교육, 주민자치/공동체 등
  - 타 부처는커녕 타 부서와도 협의가 어려운 구조이며, 농특위 발족 이후에도 타 부처와의 협력에는 역부족일 것
  - 도시재생, 커뮤니티케어, 주민자치, 사회혁신, 사회적경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제와 푸드플랜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건대, 이들 정책과제 주체들과의 협의는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?: 현재는 농림사업 프레임 속에서만
  - 타 부처와의 협력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면, 타 부처사업의 예산 활용을 통한 푸드플랜의 실효적인 추진도 쉽지 않을듯
  -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농식품부가 정부와 사회 내에서 파워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함



- **둘째, 지향하는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**
  - 로컬푸드는 확실하나, 친환경(유기농)은 과연? 지속가능한 먹거리(굿푸드 vs 그렇지 못한 먹거리)에 대한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?
- **셋째, 유통적/공급자적 관점에서 푸드플랜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(유통정책과 관장)**
  - 포괄적 의미에서의 생산-소비 연결활동이 아니라 그 중에서 협소한 유통만 보고 있다는 한계 (특히 ##시 푸드종합센터 개념): 로컬푸드 정책이 직매장 유통정책으로 협소화, 형해화되어버린 것처럼 지역푸드플랜 역시 공공급식 유통정책으로 협소화, 형해화되어버릴 것이라는 우려
  - 지역에서 만들어질 푸드종합센터를 누가 사실상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역푸드플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됨: 농협이나, 지역생산자조직이나
  - 특히 수요자 주도적 관점이 더욱 필요한 대도시 지역에서 이 점은 더욱 문제화



- **네째, 농업계와 시민사회 역시 준비부족, 토론부족 상태**

- 농업계 내부의 비전 공유여부: 농민운동, 도시농업, 친환경농업, 생협, 급식운동...
- 특히, 푸드플랜 논의를 이끌고 나가야 할 먹거리운동 진영이 농업계 바깥의 시민사회진영(환경, 보건, 문화, 지역...)을 끌고나갈 주도력이 미흡

- **다섯째, 푸드플랜은 플랜이라는 결과물이 중요한가, 플래닝(planning) 프로세스가 중요한가**

- 행정이 아니라 거버넌스가 먼저 수립되고 나서 그 단위가 중심이 되어 플랜을 만들어야 하는데, 지역푸드플랜의 경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
- 즉, 1) 지역의 거버넌스가 수립되고, 2) 기본 열개(비전)가 나오고, 3)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오랜 논의와 조사를 거쳐 세부 실천계획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프로세스
- 하지만, 현재 진행과정이나 기 수립지역의 경우, 정부의 실적위주 추진방식으로 인해 이런 프로세스를 밟기보다는 행정 주도로 형식적 거버넌스를 통해 급히 플랜을 만들고 발표할 우려

# 3. 제언

- 첫째,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푸드플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and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 필요: 다양한 관련 분야들과의 협업 and 협력
- 둘째, 사회혁신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: 먹거리/푸드플랜을 핵심사례로 접근
  - 그래야 지역푸드플랜도 제대로 갈 수 있을 것
- 결론적으로,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프로세스를 좀 늦추는 것이 좋지 않은가? (특히 국가푸드플랜)
  - 임기 중에 국가푸드플랜 최종안을 발표하고 시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국가적 공론장을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

# <해외사례 소개>

## 1. 정부의 공론장 마련: 프랑스, 스웨덴, 핀란드, 호주

- 프랑스 정부의 2017 먹거리 국민 대토론(États généraux de l'alimentation) 개최: 세부이슈별 온라인/오프라인 토론 진행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<먹거리정책 로드맵 2018-2022>(2018.2)를 발표하고, <농업부문 거래관계의 균형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법률안>(약자로 <먹거리법 loi Alimentation>, 또는 <2018 먹거리법>) 발의(현재 의회 심의중)



- 스웨덴, 핀란드, 호주도 국가푸드플랜 수립시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단체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1년 이상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

The most recent's ▾ All themes ▾ Rechercher 🔍



Production and distribution  
How to pay producers more equitably ?

🗨 3539 contributions  
👍 34295 votes  
👤 6466 people attending



Production and distribution  
How to better integrate the reality of production costs ?

🗨 955 contributions  
👍 8351 votes  
👤 2743 participants



Production and distribution  
How to accompany the transformation of our agriculture ?

🗨 4096 contributions  
👍 43919 votes  
👤 10286 participa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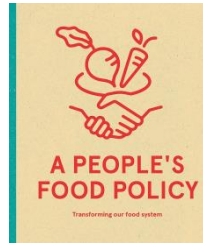


Consumption  
How to better inform consumers ?

🗨 2000 contributions  
👍 19208 votes  
👤 6112 participants

## 2. 시민사회의 개입과 비전제시: 프랑스, 호주, 영국, 미국, 캐나다

- 먹거리운동진영(네트워크 조직) 차원에서 국가푸드플랜에 대한 비판과 제안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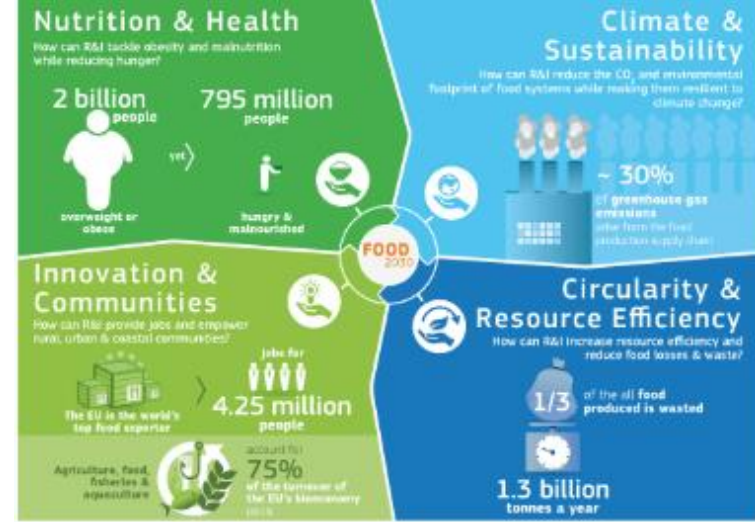


## 3. 부처간 협력: 프랑스의 중앙부처간 거버넌스 및 지방정부의 부처간 협약 사례

- 국가푸드플랜 추진시에 최상위에 <국가 운영 및 모니터링 위원회>(CNOS), 중간에 <부처간 집행위원회>(CEI)와 함께, 하위에 <부처간 워킹그룹>(GTI)을 참여부처인 14개 만큼 구성하여 주요 부처들간의 협력을 제도화
- 광역(레지옹) 수준에서 부처간 파트너십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중앙정부가 지침을 제공: 레지옹 농식품부(DRAAF), 보건국(ARS), 교육청(Rectorat)이 핵심 부처

#### 4. 사회혁신 프레임을 통한 추진

- 유럽연합의 Food 2030
- 도시-농촌(도농상생) 리빙랩 사례
- 먹거리정책과 사회혁신(유럽, 캐나다) 사례



**ROBUST**  
Rural-Urban Europe

Twitter, Facebook, LinkedIn icons

Unlocking Rural-Urban Synergies



**FRESH ROOTS** Growing food. Growing communities.

食共植 農社區發展 ਅਨਾਜ ਉਗਾਉ ਆਜ ਚਲਾਉ

What's the role of food in the social innovation agenda?

Webinar by